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與野 합의처리… 18년 만의 연금개혁 내년부터 보험료율 年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로 올라 연금특위도 출범… 구조개혁 논의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원내지도부·복지위 간사가 모여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를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0원을 부담해 현행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

(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올라 2170만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로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이날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

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이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줄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발표… “24일 오전 10시 선고”

尹 탄핵심판 결론 ‘미리보기’ 가능성 헌재 “금주尹 탄핵심판 선고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를 넘기게 돼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1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탄핵 반대 시위자가 던진 계란을 맞은 뒤 손수건을 들고 있다. /뉴스1

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영 체제 위한·위법성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13일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담겨 있고, 헌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다뤘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12·3비상계엄에 위한·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기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이 한 차례로 끝난 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가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만큼, 헌재가 이 사건에서 ‘자기부정’을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며 “(선고도) 이번주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주 목·금요일(27·28일)로 밀리거나,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崔 대행, 헌법 위배사항 지속… 탄핵절차 개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진행 내란상설특검 후보추천 요청도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의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

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사피 운영 기초, 공공외교 강화 등 논의

» 1면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주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

동에서 10여분 동안 사피의 운영 기초, 정부·기업을 토대로 한 공공 외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 아닌가”라며 “나머지 지원 패키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